

보도시점 4.24 (금) 석간 < 4.24 (금) 09:30 >

‘창업’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 거점 ‘창업도시’ 10곳 조성

- 수도권 쏠림 완화, 수도권 중심의 창업 구조를 다핵구조 생태계로 전환 -
- 기술인재 중심 4대 도시 우선 선정 → 지역 주력산업 연계 6곳 추가 -
- 2030년까지 글로벌 창업생태계 100위권 창업도시 5곳 조성 목표 -

정부는 4월 24일(금)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지난 1월 30일(금) 발표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추진되는 것으로,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지정하여 지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창업도시’란 지역 대학·연구소의 혁신인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실증 인프라 등 지역의 창업자원을 기반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투자 등 정부의 창업지원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내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도시를 의미한다.

1. 추진 배경

현재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국가 단위 및 서울은 글로벌 상위권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비수도권 지역은 글로벌 경쟁력에서 크게 뒤처진 상황이다.

실제로 주요 지역 도시들의 창업생태계 순위는 300위권 이하에 머무르고 있으며, 투자·인재·인프라 등 핵심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창업자원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거점 중심의 ‘다핵형 창업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해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글로벌 창업생태계 100위권 창업도시 5곳 조성을 정책 목표로 한다.

2. 추진 방향 및 추진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서울에 가지 않더라도 창업하고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지역에 조성하기 위해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3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❶ 4대 과기원 소재지를 테크 창업도시로 선정 → '30년까지 10곳 조성

중기부는 우수한 인재 양성 인프라를 갖춘 4대 과학기술원 소재 지역(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창업도시로 우선 선정하여 선도모형을 구축할 예정이다.

4대 지역에서는 과기원별 '딥테크 창업중심대학' 신규 지정(~'27년 4개), 과기원 내 '창업원' 신설 및 과기원-지역대학 교육협력 강화 등을 통해 지역 핵심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원의 교수 및 학생 창업을 저해하는 창업 규정과 학사제도를 대폭 완화*하여 대학발 창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 창업 휴직(現 3년)·겸직(現 2년) 기간 연장, 창업 휴학(現 4년) 제한 폐지 등

4대 창업도시 선정 이후에는 지역 주력산업(벤처금융, 에너지 및 로컬 등)과 연계하여 6개 도시를 추가 선정한다.

6대 지역의 경우 지방정부가 지역 특색에 맞는 세부 전략을 마련하고, 중앙정부가 예산과 사업 등 창업지원 역량을 집중 공급하는 “지방정부 주도, 중앙정부 지원” 방식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지역의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공공 데이터 및 실증 인프라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실증형 기술창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❷ 거점 창업도시 내 창업기업의 성장·정착 기반 마련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화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특히 지역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창업기업 전용 연구개발(R&D) 및 팁스(TIPS)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 도시 내 신기술에 대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성장의 걸림돌을 해소한다. 또한 2026년 4,500억 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모펀드)' 조성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3.5조 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정부 수요를 반영해 지역의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창업기업의 공동기숙사, 사무·네트워킹 공간 등 정주·창업 공간을 확충할 예정이다.

③ 지방정부 중심 창업도시 거버넌스(민관협력) 구축

‘사업화’, ‘투자’, ‘연구개발(R&D)·실증’ 등 종합지원을 위해 지역 내 혁신기관(연구소, 대학,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창업도시 추진단’을 통합 거버넌스(민관협력)로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엔젤투자허브 및 한국벤처투자 지역 사무소도 대폭 확충하여 투자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혁신주체를 통합하는 지역 창업 행사를 창업 도시에서 개최해 기술·사업화 교류를 촉진할 계획이다.

3. 향후 일정

창업도시로 지정된 지역은 '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재정지원을 받게 되며, 중기부는 연간 단위로 추진 성과 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반영해 과업 및 지원 규모를 조정하면서 '30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수도권 수준의 창업 생태계를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창업거점 조성계획”이라며,

“단순한 공간 조성을 넘어 인재와 자본, 기술이 결합하여 새로운 혁신을 창출하고, 창업가들이 지역 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지역 창업생태계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5월중 지방정부와 4대 과기원 등이 참여하는 ‘창업도시 전략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도시별 산업·기술 특성이 반영된 ‘창업도시 조성 방향’이 발표되며,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참석 기관 간 업무협약도 진행될 예정이다.

※ (별첨)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 계획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책임자	과 장	남정렬 (044-204-7660)
		담당자	사무관	신종화 (044-204-7615)
			주무관	이동경 (044-204-7607)